

포스코 '10일 조업정지'에 노사 한 목소리

“우리가 환경오염 공모자냐”… 해외도 없는 처분에 반발



블리더 개방, 안전 위한 필수 절차
복구 3개월 소요… 8000여억 손실
환경단체, 기업의 사과·인정 촉구

철강업계에 내려진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업중지 10일 처분에 대해 포스코 노사가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경북 포항시청에서 경북도와 전남도가 지난 수십년간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고로(용광로)를 정비할 때 가스 배출 안전장치인 블리더로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했다는 혐의로 조업중지 10일 처분을 하려는 데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포스코는 최종 처분이 내려지기 전 각 지역 법원에 집행처분 신청 및 조업정지 취소에 대한 소송에 곧장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소속인 포스코노동조합은 포스코 내 복수 노조 가운데 교섭대표 노조로 조합원수가 6600명이 이른다.

노조는 “100여m 높이 고로 최상부에 설치된 블리더는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가스를 배출해 조업 안정과 노동자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 설비”라며 “전 세계 제철소가 고로를 정비할 때 블리더 개방을 직원 안전을 위한 필수 작업 절차로 인정해 별도 집진 설비를 추가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단체는 드론을 활용한 간이



11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김인철 포스코 노조위원장과 노조원들이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준비중인 조업중지 10일 처분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영향 평가를 회사 측이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제철소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를 비윤리 행위에 가담한 공모자로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광양제철소, 경북도는 5월 포항제철소에 10일간의 조업중지 처분을 예고했다. 고로(용광로) 정비 시 ‘블리더(안전밸브)’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는 5기, 포항제철소에는 4기의 고로가 운영되고 있다. 전남도는 오는 18일 청문회를 열어 광양제철소의 조업중지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등은 고로가스에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먼지, 황화

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납, 아연, 망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위해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철강생산의 첫 단계인 고로 조업은 높이 110m의 거대한 고로 상단에서 철광석과 유연탄을 투입하고 아래쪽에서 고온, 고압의 바람(송풍)을 불어넣어 쇳물을 만든다. 안전을 위해 연간 6~8회 정기 정비를 하고 있다.

정비 시 송풍을 멈추는 과정에서 외부 공기가 고로 내부로 유입돼 내부 가스 및 탄화물 폭발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에 수증기를 주입하는데 이때 주입된 수증기와 잔류가스의 안전 배출을 위해 고로 상단의 블리더를 개방한다.

문제는 경제적 피해 금액이다. 조업중지 10일이 적용될 경우 수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수 있다. 고로 안에 있는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가 균열될 수 있기 때문에 재가동과 정상조업을 위해서는 최소 3개월,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걸린다.

고로 1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약 120만톤(t)의 제품감산이 발생해 8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이는 업계 측의 관측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조업중지 처분에 내려져 정상조업을 하는 데까지 장기화될 경우 기술적 대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사태에 대해 기업들

의 사과와 책임 인정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사태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공식사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인정 ▲책임회피하는 여론몰이 중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대폭 저감 등을 요구했다.

국내 철강업계에 내려진 10일간의 조업중지 처분은 해외 제철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특히 환경 규제를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유럽 지역의 경우 제철소의 ‘블리더’ 개방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제철소는 ‘블리더’를 안전장치로 간주하며 국내 제철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고로 후풍 과정은 가스 중독, 폭발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200여년 동안 전 세계 고로가 서로 공유하고 보완하여 현재와 같은 후풍 프로세스가 정착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독일에서는 정비시 블리더 개방을 일반적인 정비 절차라고 인정하고 있어 관련 법적 제재사항은 없으며, 다른 선진국에서도 정비시 고로 안전밸브의 개방을 특별히 환경법규로 제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세계철강협회(Worldsteel)도 전세계 회원사들에 후풍 및 안전밸브 개방에 대해 문의한 결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대체기술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성운·정영우 기자 ysw@metroseoul.co.kr

“ESS 화재, 제조결함·관리부실 복합 인재”

민관조사위

전국 23곳의 화재원인 5개월간 조사
배터리 제조사 등 책임 논란 거셀 듯

전국 23곳에서 잇따른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 결과 제조결함과 관리부실, 설치 부주의 등 4~5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는 배터리 제조사와 직접 관련된 부분도 있어 해당 업체들의 책임 소재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위원장 김정훈 교수)가 약 5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화재 재발 방지 및 ESS 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민관조사위 발표에 따르면 ▲ 배터리 보호 시스템 미흡 ▲ 운용관리 부실 ▲ 설치 부주의 ▲ 통합관리체계 부족 등 4가지가 직·간접 화재원인으로 꼽혔다.

또 일부 배터리셀의 제조상 결함도 발견됐으나 이는 화재 원인으로 확인되는 않았고 화재 가능성을 높이는 요

《ESS 보급 현황》

/자료=한국전기안전공사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사업장 수	30	47	124	74	268	947	1,490
배터리(MWh)	30	36	145	207	723	3,632	4,773

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위는 먼저 합선 등에 의해 큰 전류나 전압이 한꺼번에 흐르는 전기적 충격이 가해졌을 때 배터리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랙 퓨즈, 직류접촉기, 버스바 등 배터리 보호시스템이 전기충격을 차단하지 못하거나 성능이 저하돼 폭발하는 것은 결국 배터리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조사위는 보고 있다.

두번째 직접적 원인은 ESS를 설치해 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조사위는 지적했다.

보통 ESS가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설비와 함께 바닷가나 산골짜기 등 외진 곳에 설치돼 있어 상주 관리인이 없는 탓에 온도도 습도 등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큰 일교차로 이슬이 맺히고 다량의

먼지 등에 노출돼 절연이 파괴된 결과 불꽃이 튀기는 등 화재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두가지 요인이 가장 큰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직접적 원인으로는 신산업인 ESS를 영세 시공업체들이 처음 다루다 보니 고온다습한 곳에 배터리를 사나할 방지하는 등 설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지목됐다.

화재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ESS를 이루는 배터리, 전력변환장치(PC S), 소프트웨어 등 개별설비들이 한몫처럼 설계, 또는 운용되지 않은 것이 네 번째 요인으로 지적됐다.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운용되지 않으니 화재를 예방하거나 일부 발화가 전체 큰불로 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재계, 광폭행보 주춤·운신 폭 좁아져

>> 1만 '무역전쟁 중인데...'서 계속

‘민간 외교관’ 손발 묶여

이런 가운데 경영 압박을 가속화하면서 기업을 더 무겁게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공정위가 최근 내부거래 단속을 이유로 현대글로비스와 LG 판토스 등을 현장 실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대기업에 ‘군기’를 잡으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도 광폭 행보를 멈추고 운신 폭을 크게 좁혔다.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인 데다, 일부 의원들과 사법부가 이 부회장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를 연결지으려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례적으로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설명문을 배포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삼성전자 주요 인사들을 구속한 데 이어 이 부회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현호 사장까지 소환하고 삼성전자를 위협하고 있다.

당장 이 부회장은 다음달 미국에서 열리는 선밸리 컨퍼런스에도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밸리 컨퍼런스는 글



지난 2015년 12월 삼성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는 정현호 사장. /연합뉴스

로벌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모이는 행사로, 이 부회장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출석하다가 2017년 구속 이후 발걸음을 끊은 상태다.

다른 기업 총수와 최고 경영자들도 대외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작동하던 ‘민간 외교관’ 손발이 묶인 셈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은 기업이 나서기 어렵기는 하지만, 정치적 압박에 그나마 운신의 폭을 더 좁게 하고 있다”며 “비공식적으로라도 정부가 움직여줘야 경제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